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학

2019년 6월 15일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4
정책론	6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2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3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9	-	2	4	-	3	2

0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② [X] 효과성은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로,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반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능률성이다.

▶ 올바른 지문

②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summary | 능률성·효과성·생산성의 비교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
산출/투입	산출/목표(비용에 대한 고려×)	능률성+효과성
투입최소화, 산출극대화에 관심	목표달성여부에 관심	종합적
산출과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부적 관계	조직과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외부적 관계	종합적
19세기말 행정관리론	1960년대 발전행정론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98~105



0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설】 ② [X] 대표관료제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구성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로 실적주의의 형식적 기회균등에 대한 수정 요구에 따라 등장하였다. 하지만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실적주의의 한계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460~462



0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 ②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해설] ④ [X]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토론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반복·종합하여 예측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에서는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최종목표로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일치를 유도한다.

summary | 전통적 델파이 기법 vs 정책델파이 기법

	전통적 델파이기법	정책델파이기법
적용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에 일반전문가	전문가 이외의 이해관계자 등 식견 있는 사람
익명성	완전한 익명성 (직접대면접촉의 상호토론 X) 익명으로 솔직한 의견 반영을 기대	선택적 익명성 (초기단계에서만 익명성이 요구.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토론)
통계	일반적인 통계처리	의견차이를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 도출(의견일치를 유도)	구조화된 갈등(유도된 의견대립)
토론	토론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or 대면토론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234~237



0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② 정책실험의 수행
- ③ 협상이나 타협
- ④ 지연이나 회피

[해설] ④ [X]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에는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소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 해소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으로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보의 충분한 획득, 정책델파이, 집단토론, 상황 자체에 대한 통제(협상·타협 등의 방식) 등이 있다. 지연이나 회피는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는 소극적 대처방안이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247



| 말 바꾸기 |

0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③ [X] 광역행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이다. 따라서 광역행정은 통일적 행정 처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올바른 지문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910

▶ ③

| 개념 문제 |

0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 ②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 ③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 ④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① [X]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이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758, 759

▶ ④

0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① [O] 통합재정(통합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재정 전체를 의미한다.
 ② [X]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는 비금융공공부문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X] 통합재정은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 간 진출입거래 등 이중거래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세출·순세입의 규모로 작성된다.
 ④ [X]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IMF 권고에 의해 도입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 ④ 1979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628~630



0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 ② 선거구 조정 정책
-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해설】 ①, ②, ③ [O] 구성정책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구조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으로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선거구 조정, 공직자의 보수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④ [X] 국유지 불하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 분배(배분) 정책

summary | 정책유형의 분류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배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 정책내용이 소규모 단위로 구분가능 예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사회간접자본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 계급 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필요 예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사회보장제도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됨.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예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등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예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발생 /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예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공직자의 보수 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예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등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예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 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등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189



| 말 바꾸기 + 개념 문제 |

0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 ②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③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① [X] 우리나라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이 분야별, 부처별,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한다.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지정하고 예산 자원 배분의 재량은 확대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X]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 [O]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에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월, 예비비, 계속비, 총액계상예산제도 등이 있다.

④ [X]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올바른 지문

- ① 재정당국은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지정하고 각 부처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② 예산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537, 645, 663~668, 704

▶ ③

| 말 바꾸기 |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해설】 ④ [X] 문재인 정부는 원래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summary |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 ①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 ②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 ③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개편
- ④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장관급으로 격상)
- ⑤ 대통령경호실 개편(대통령 경호처로 변경, 처장 직급을 장관급 ⇨ 차관급으로 조정)
- ⑥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661

▶ ④

| 이론 비교 |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②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임용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이 보수적으로 되거나 관료주의화 되는 경향을 만들며,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전문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무원집단이 보수화되고,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p.457~459

▶ ②

| 이론 비교 |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론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c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해설】 ② [×]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론론에 입각하고 있다. 신행정학은 문제지향적·처방적·실천적 행정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론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p.128

▶ ②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 ②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 ③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④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해설】 ④ [X]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에 대한 적합한 보상, 적극적 예외관리, 수동적 예외관리, 자유방임 등의 특징을 가진다.

▶ 올바른 지문

- ④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summary | 변혁적 리더십 vs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초 점	일반 관리층	최고 관리층
관리전략	합리적 교환관계와 통제 하급욕구의 충족	비전공유를 통한 내적 동기유발 고급욕구의 만족
변화관	안전지향(폐쇄적)	변화지향(개방적), 환경적응지향
조직구조	고전적 관료제	탈관료제(구조의 융통성 중시)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p.414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해설】 ③ [X] 에치오니(Etzioni)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주장한 것은 혼합주사모형이다. 최적모형은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합리모형이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점증모형의 타성적·선례답습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③ 드로어(Y. Dror)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p.257, 258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제도에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해설】 ④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18세 ×)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올바른 지문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845~847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 ②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 ③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④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해설】 ② [○]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은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핵심신념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학습,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체제 구조의 변화로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279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해설] ① [X] 진실험설계(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실험이므로 내적타당성이 높은 방식이다. 진실험 설계는 역사적 효과, 성숙효과, 선발효과 등의 영향이 줄어들어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진실험설계보다 준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300

▶ ①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설] ① [X]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되, 필요시 소속장관이 판단하여 직무수행태도의 평가 또는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X]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기간 중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여 누적된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④ [X] 우리나라의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되 필요시 적성, 근무태도 등을 추가 지정하여 평가한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기간 중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여 누적된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 ④ 우리나라의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511, 517~520

▶ ③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③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④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해설】 ②, ③ [X]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나 정보화·연구개발사업 등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④ [X]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2000년 예산편성 때부터 적용) 200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 ③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④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적용하였다.

summary | 예비타당성 조사 vs 총사업관리제도

	예비타당성조사(2000)	총사업비 관리(1994)
주체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내용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사업규모 & 총사업비 & 사업기간 협의
대상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사업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를 받는 민간기관사업 가운데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경우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661~663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해설】 ③ [X]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이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의 범위에 있어서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올바른 지문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이 있다.

【참고】 2019 신용한 행정학 p.609

▶ ③